

#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lobal Governance

주 명 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 1.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세계금융위기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측은 브레튼우즈에서 국제통화질서 확립을 위해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IMF와 IBRD를 설립하여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를 수립하였다. 그 결과 지난 70여년동안 세계GDP는 14배 증가하였고, 세계무역규모는 무려 377배 증가하여 외형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보유고와 달러통화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1971년에는 금환본위제가 중지되었다. 금 공급량은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39% 늘어났지만, 세계GDP는 128%, 세계무역규모는 440% 증가하였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를 과잉공급하여 가치가 폭락하였기 때문에 금환본위제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1973년부터는 달러본위제로 운영되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누적된 국제수지적자로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독일과 일본에 평가절상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금값은 1온스당 850달러로 급등하였다. 더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유일 초강대국이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발권력을 남용하였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달러통화량을 급팽창시키자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기축통화로서 가치저장기능을 상실하여 급기야는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70여년동안 달러통화량은 무려 61.8배 늘어났고, 금값은 1온스당 1,300달러로 35.8배 폭등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호모순되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50여년간 계속된 결과였다. 달러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달러가치는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을 줄이면 달러가치는 올라가지만 국제

무역이 위축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금부족과 만성적인 쌍둥이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로버트 루빈(Robert Rubin)과 헨리 폴슨(Henry Paulson)과 같은 골드막스 출신 인사들을 재무장관으로 영입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화폐부문을 급팽창시켰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포화된 상태에서 화폐부만만 팽창되자 자본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정부보증기업인 페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MBS(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였고, FRB는 MBS를 매입하여 유동성을 대폭 확대시켰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이 상품들에 최고등급(AAA)을 부여해 연기금투자를 유인한 결과 화폐공급이 급증하였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하여 부동산투자를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확대하여 거품을 키웠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자 부동산 거품이 꺼졌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압류와 주택매도가 급증하자 부동산가격은 폭락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줄지어 파산하였고 대다수의 중산층은 하우스푸어로 몰락하였다.

결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달러본위제의 맹점이 드러났다. 세계금융위기를 해소시키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2009년 이후 4.3조달러를 시장에 풀어 자국경제는 활성화시켰지만 각국의 화폐전쟁을 심화시켰다. 또한, 출구전략으로 유동성을 제한하여 신흥국들의 자본시장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고수하고 있는 제로금리를 인상한다면 GDP대비 197%(사회보장제도 포함시 430%)에 달하는 부채총액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어 세계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달러를 남발함으로써 세계 각국들은 외환투기세력들로부터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총 13.4조달러(세계수출총액의 71%)에 달하는 외화를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국가가 기축통화를 발행하면 국익과 세계적 공익이 상충될 수 밖에 없으며 세계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기원전 478년 아테네가 주도하여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델로스동맹을 결성하였지만 아테네가 동맹자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파국을 맞이한 것과 유사하다. 달러중심의 현 세계경제체제는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금환본위제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성장속도와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SDR(특별인출권)을 다시 공정하게 개선하여 세계화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 브레튼우즈체제의 개혁

### 1) SDR개혁과 세계화폐공급

미국의 발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세계경제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SDR통화바스켓을

조정하여 세계화폐로 공급하고 국제결제통화로서 가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의 SDR은 소수 국가들의 국익만을 위해 왜곡되었으며 실제기능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 EU, 일본을 합해도 세계무역의 46.2%, 외화보유고의 20.9%에 불과하지만 SDR통화바스켓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 G20(세계GDP의 86.3%, 국제무역의 79.3%, 외화보유고의 72.4%)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규모와 외화보유고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SDR통화바스켓을 조정함으로써 결제통화의 수요 및 실제경제력과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규모와 외화보유고는 각국의 경제력과 세계화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이다. GDP는 세계화폐와 연관성이 적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비중이 커서 특정 국가의 경제력과 세계화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신뢰도가 낮다.

경제실체에 맞게 통화바스켓을 조정하여 과다반영된 미국(41.9%→10.3%), EU(37.5%→16.6%), 일본(9.3%→7.2%), 영국(11.3%→3.4%)의 비중을 축소시켜서 그동안 통화바스켓에서 배제되었던 나머지 G20국가들에게 공정하게 재배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실체와 결제통화의 실수요 및 영향력이 같아짐으로서 국가간 갈등을 없애고 공정한 질서아래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DR을 세계화폐로 유통시켜야 한다. 오늘날 세계금융위기는 실물경제가 포화된 상태에서 화폐부문만 급팽창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SDR을 명실상부한 세계화폐(가칭 Globa<sup>1)</sup>)로 유통시켜야하며 세계경제성장률과 적정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여 현행 통화량(M0) 5.2조달러의 5%수준인 2,600억Globa를 매년 공급해야 한다. 세계화폐를 공급하여 절대빈곤층을 지원하고 난민정착지역을 조성하는 한편 UN상비군의 운영예산으로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세계인구 71억명 중 하위 12억명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이들은 국제테러의 뇌관과 같다. 만약 이들이 자력갱생의 의지를 갖고 상·하수도시설과 공동화장실 및 도로 등 기초인프라구축에 적극 나선다면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실물경제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빈국지원이 독재정권과 부패세력에 의해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UN이 직접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조건으로 집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과 테러 및 빈곤을 피해 망명한 3,900여만명의 난민들이 정착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루 최저생계비인 1Globa만 지급해도 연간 140억Globa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실물경제를 확대할 수 있다.

세계화폐의 일부는 UN상비군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전비에 비해 실효가 적고 대표적 분쟁국가인 남수단, 이집트, 시리아사태에는 개입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

1) “세계적인”, “지구의”란 의미의 단어 Global에서 그 의미와 발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Globa라 칭함.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적들이 급증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국가가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05년 이래 소말리아해적들은 218척의 선박을 납치하였고, 2010년에는 1억7,600만달러의 몸값을 받아냈다. 그 결과 운송료와 보험료가 급등하여 2012년에는 18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다.<sup>2)</sup>

이에 더해 전 세계의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연간 2,090여만명(세계인구의 0.35%)의 국제인신 매매가 발생<sup>3)</sup>하고 있으며, 실종아동들만 연간 800여만명에 달한다.<sup>4)</sup> 이것을 방조하는 것은 반인륜적 직무유기이며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조직들은 초국가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이를 통제해야 되는 각국정부들은 국경의 장벽이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UN이 직접 상비군을 모집·운영해야 국제분쟁과 국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의 방만한 재정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UN은 회원국들로부터 수시로 9만8,000여명의 병력과 75억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유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세계인구 71억명 중 1만명당 1명의 상비군을 모집하되 인구대국은 최대 1만명으로 제한하여 총원 70만명이 될 때까지 나머지 국가에서 인구비례대로 총원하면 세계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시민번호를 부여해 국제범죄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이 발달함으로서 지문과 홍채인식을 통해 범죄자들의 신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국제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 세계의 절대빈곤층이 자립자조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에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난민정착지역을 조성하고 UN상비군예산으로 세계화폐를 공급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명분있게 실물경제를 확대시키고 세계치안을 확보해야만 안정된 질서하에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이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2) 지역금융안전망 구축과 지역통합

국제금융기구들을 일시에 정상화시키는 것은 기득권국가들이 반대할 것이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권역별로 이 기능을 수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유럽안정매커니즘(2012년), 아랍통화기금(1976년), 중남미준비기금(1978년)이 설립되어 지역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2000년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먼저 지역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통합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국제금융기구 기능을 수

---

2) WorldBank(2013), The Pirates of Somalia: Ending the Threat, Rebuilding a Nation.

3) ILO(2012), ILO Global Estimate of Forced Labour.

4) ICMEC(2012), The Global Problem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행해야만 궁극적으로 세계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유럽권, 아시아권, 미국권으로 삼분화되었고 역내무역이 점증하는 가운데 특히 지역통화가 없는 아시아경제권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아시아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비축한 외화보유고가 총 7조달러(총 수출대비 124%)에 달하여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아시아는 금융위기재발을 막고자 CMI에 합의하였고, 2012년 CMIM에서 공동기금규모를 2,400억달러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CMIM은 통화스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ASEAN과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은 이미 3조6,000억달러로 전체무역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58년 EEC(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할 때의 역내무역비중인 29.0%보다도 높으며, 중국의 성장과 FTA의 확대로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개국에 불과하던 EEC는 오늘날 28개국의 EU로 발전하여 역내무역비중이 68.6%(2012년)에 달하며, 이중 18개국은 유로존<sup>5)</sup>을 구성하여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EEC의 설립당시보다 지역통합수준이 높고 역내무역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U(Asian Union)와 ACB(Asian Central Bank)를 만들고, 아시아지역통화인 Aon<sup>6)</sup>(가칭)을 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Aon을 발행하면 달러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무역갈등의 요인이 되는 환율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역내무역비중을 70%이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자간 통화스왑에 불과한 CMIM를 AMF(Asian Monetary Fund)로 격상시켜 확실한 금융안정장치를 만드는 동시에 AU와 ACB를 설립하여 Aon을 발행해야할 것이다.

사실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IMF와 세계은행을 개혁하는 실질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금융기구들의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는 꾸준히였지만 그 실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AMF와 AU 및 ACB가 지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IMF와 세계은행의 진정한 개혁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조세피난처와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세피난처와 지하경제는 세계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불공정사회를 조장하여 세계경제체제의 존속자체를 위협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조세피난처에 유입된 자금은 21조달러(세계GDP의 28%) 이상이며, 지하경제규모도 14~2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21조달러의 자금으로부터 매년 발생하는 3%의 자본소득에 대해 20%만 과세해도 1,2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규모를 세계GDP대비 10% 이하로 낮춘다면 7조~14조달러

---

5) 유로존에 정식으로 가입한 국가는 18개국이며, 유럽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중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안도라는 EU와 협정하에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고, 마우트 등 4개국은 협정없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음.

6)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 한국의 원 등 아시아 통화의 발음을 조합하여 거부감을 없애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Aon으로 칭함.

가 양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양성화된 자본은 UN의 세원으로 활용하여 인류전체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세피난처의 자금이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국가정부의 세수를 늘려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

세계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도피시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고갈되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근로의욕을 잃게 된다. 미국이 세계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4.3조달러라는 천문학적 인 현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MZM의 유통속도가 최고치였던 1981년 3.5에서 현재 1.4로 하락하였다.<sup>7)</sup> 통화량의 증가폭에 비해 GDP성장이 더딘 이유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탓도 있지만 통화의 상당부분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상위 60대 기업들은 1,660억달러를 조세피난처로 도피시켜 이익의 40%가 탈세되었으며<sup>8)</sup> 미국인구의 0.03%인 3,0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가 10여만명의 조세회피자금은 무려 9조8,000억달러에 달한다.<sup>9)</sup> 중국에서도 조세피난처로 1조달러 이상의 자산을 유출시켰다.<sup>10)</sup>

영국 펀드시장에는 2009년 2분기에만 영국의 자치령인 Jersey(2,180억달러), Guernsey(740억달러), Isle of Man(400억달러) 등 으로부터 총 3,320억달러가 유입되었다.<sup>11)</sup> 인구가 수만명에 불과하고 GDP가 수십억달러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이 공공연한 조세피난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해외도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피난처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별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금융감독원(World Finance Supervisory Board, WFSB)을 만들어 통제해야만 한다. WFSB는 조세피난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WFSB는 금융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재정적자를 GDP대비 3%이내, 정부부채는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국가들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국제기구의 의결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여 방만한 국가운영을 막고 세계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는 영수증을 세계복권화함으로서 양성화시킬 수 있다. 영수증만 제대로 발급되어도 개

---

7) Money with Zero Maturity. Velocity of MZM Money Stock, Economic Research,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8) S. Thurm, & K. Linebaugh(2013), More U.S. Profits Parked Abroad, Saving on Taxes, Wall Street Journals, Mar 19, 2013.

9) C. D. Leonnig(2009), Report Finds Major U.S. Companies Have Offshore Tax Havens. Washington Post, Jan 16, 2009.

10) ICIJ(2014), Leaked Records Reveal Offshore Holdings of China's Elite.

11) C. Mortished(2009), Tax haven report lays emphasis on vital role of Crown Dependencies, The Times, Oct 30, 2009.

인과 기업들의 수입과 지출이 연쇄적으로 투명해져서 국가정부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첨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면 동시에 세계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국들이 영수증 액면가의 1%를 UN에 납부하면 UN은 이 중 절반은 당첨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난민정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첨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되, 액면가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 사행심리는 극소화하고 복권효과는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피난처와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은 UN의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자본주의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조세피난처와 지하경제가 공공연하게 방치된다면 부의 양극화와 탈세가 무제한 확장될 것이다. 이는 곧 현 세계정치경제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는 필수적 조치이다.

#### 4) 빈부격차의 해소와 이주제한완화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자본과 상품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지만 노동의 이동은 여전히 제약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 만약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고, 후진국은 소득증대와 자본유입으로 세계적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의 이점만 누리면서 호경기에는 외국의 저임노동력을 받아들이다가 불경기가 되면 자국의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동력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세계적 빈부격차와 소비감소를 증폭시킨다.

이주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후진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전 세계적 빈부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면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여 테러조직으로 돌변하고 결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국가 내에서는 누진세와 복지제도 등으로 이를 완화시키지만 세계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게 적절한 이민쿼터를 할당하여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이들의 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의 이민자수는 2억3,000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해 선진국들의 인구대비 이민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인구대비 이민자 비중이 1990년 2.1%에서 2013년에는 13.8%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이 0.51%에 이른다. 영국(6.4→12.8%), 독일(7.4→11.9%), 이태리(2.5→9.4%), 미국(9.1→14.3%) 등 지난 23년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0.25%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구대비 연 0.2%의 이민쿼터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매년 0.01%씩 증가시키면 세계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류의 기본권을 구현할 수 있다. 이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저성장의 덫에 갇힌 선진국도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후진국은 유입된 해외송금을 통해 자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주자유는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쿼터내에서는 이민수용국이 노동력을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급노동력만 유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임금을 하락시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부담을 가중시켜 이민수용국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후진국이 상생할 수 있는 이민쿼터의 최적점을 찾고 이것을 제도화하면 소득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유가 일시에 확대되면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먼저 비자제도를 세계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이주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전화번호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및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체계를 종합하여 세계시민번호를 부여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범죄자들의 이주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동시에 관광객과 이주노동자를 구별하는 일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 5) 국제기구의 정상화

세계화폐를 공급하여 빈국의 경제자립과 난민정착을 지원하고 UN상비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UN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현행 UN총회와 더불어 인구비례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의결하는 세계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UN총회는 인구 14억명의 중국과 수천명에 불과한 국가의 의결권이 동등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부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회는 인구 1,000만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인구대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허용의원을 3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500만명 이상의 국가들까지는 최소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이하의 국가들은 인구비례기준에 맞게 연합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면 총 500여명의 세계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먼저 ICJ(국제사법재판소)와 ICC(국제형사재판소)를 확대시켜 세계연방재판소를 만들고 국제분쟁과 범죄를 다뤄야 한다. 현재 ICJ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ICC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가입하지 않아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소권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연방재판소에 이들 국제재판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기업체, 국제기구 및 국가까지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만 세계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오늘날 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이 되는 IMF와 세계은행은 본래 목적이 변질되어 일부 선진국과 국제금융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시장이 부실한 국가들에 유동성을 과잉공급하고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여 자산을 부실화시킨 다음에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입하였다가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도 1997년 외화보유고가 적지 않았지만 단기외채가 많아 기체연장을 못하게 되자 국가부도에 직면하여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였다. 당시 IMF는



투기세력들이 우량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하였으며 이것을 불과 몇 년 뒤에 2~3배 이상 비싸게 되팔렸다.

금융투기세력들의 이와 같은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먼저 미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G20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규모와 외화보유고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투표권을 5년마다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16.8%→7.9%), 프랑스(4.3%→2.8%), 영국(4.3%→2.6%)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국(3.8→18.3%), EU(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제외, 10.0→12.9%), 한국(1.4→2.8%)의 비중은 높아져 공정한 세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 3. 세계금융위기 속 한국의 생존전략

오늘날 극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일 갈등은 세계금융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무역규모가 GDP의 88%를 차지하므로 지역갈등으로 수출이 제한되거나 환율전쟁이 촉발되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근시안적 이익을 좇아 특정국에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고 아시아통합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CMI는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고 아시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라는 역할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사명과 여건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무역 10.3%, 외화보유고 5.4%로서 CMI에서 할당된 분담금 비중인 16%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와 비교해 32%를 분담하는 중국은 국제무역 50.9%, 외화보유고 62.3%를 차지하고, 일본은 14.8%,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분담금 비중을 할당받아 급부상하는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도록 하였다.

만약 두 국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통화교환협정이 연기되면 아시아는 또다시 국제투기자본의 표적이 되어 공멸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게 과분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2000년 CMI를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다툼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통합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무역거래상대국에 위안화결제를 요구하며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설립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아시아지역 내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AIIB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에 미국은 제동을 걸어 한국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투표권이 왜곡된데 기인한다. ADB에서 일본이 15.7%, 미국이 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분율은 6.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1,620억달러의 ADB자본금을 두 배로 유상증자하고, 역대 자

본기여국의 역할이 가능한 한 증대되도록 지분율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차용국과 역외국의 지분은 축소하여 중국과 일본에 각각 24%, 미국 16%, 한국 12%, 나머지 국가들은 24%로 지분율을 재배정해야 한다. 또한, ADB의 설립목적에 맞게 미국을 포함한 역외국의 지분율은 상한을 두어 이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차입금을 청산하는 차용국은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되 5년마다 경제현실에 맞게 지분을 재배정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중국이 경제현실에 맞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AIIB설립으로 야기될 미국·일본과의 충돌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CMI정신을 되살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중재해야만 아시아통합을 달성하고 세계통합으로 이끌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력을 3배이상 증가시키고 자주국방력을 갖춰야만 한다. 2,500여년동안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 서 지정학적 약점만 부각되어 수많은 외침을 당하였다. 그러나 만약 지정학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수도는 양국화된 세력을 절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에 위치한 캔버라, 프랑스계 퀘벡과 영국계 토론토의 중간지점인 오타와, 북부 뉴욕과 남부 애틀랜타의 중간지점인 워싱턴D.C 등이 그렇다. 또한 벨기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접점에 위치하여 양차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브뤼셀이 지금와서는 EU와 NATO의 수도가 되었다.

한국이 세계금융위기 속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중국과 일본을 중재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키우려면 우선 물류허브와 FTA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대규모 인구증가와 국토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와 FTA허브를 만들어 소득수준을 3배로 키워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북미경제권과 아시아경제권을 연결하는 대권항로(Great Circle)와 아시아와 유럽의 해상운임과 시간을 30% 절감할 수 있는 북극항로의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또한, 한국은 미국·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데다가 한·중 FTA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체결국가에서 생산·가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 생산기지를 한국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만에 초대형항만을 건설했어야 했지만 실기하는 바람에 부산항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지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2002년만 하더라도 부산항(940만TEU)은 3위 항만이였다. 당시에는 중국의 물동량이 급증하였지만 자체 항만 인프라가 없어 부산을 거점항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상하이(820만→3,360만TEU)가 1위가 된 반면에 부산(940만→1,770만TEU)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5위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Ningbo(186만→1,730만TEU), 칭다오(341만→1,550만TEU), 톈진(241만→1,300만TEU)이 지난 10년동안 급팽창하여 조만간 부산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이 화중·화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만에 거점항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경쟁적 위치에 놓일 것을 염려해 개발을 억제하는 바람에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물류와 FTA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5,000만TEU 이상의 초대형항만을 건설해야한다. 그래야만 중국의 화중·화북지역에 밀집된 물류를 집결시키고 북미와 유럽의 거점항을 연결하는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 분업화 현상으로 가장 저렴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는 부품을 생산하고, 물류거점에서 이를 종합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부품과 완성품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여 항만과 더불어 배후산업단지조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결국 글로벌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대형항만건설은 필수적이며,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Maersk(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 Group(프랑스) 등 10대 해운사들을 유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Fedex, DHL, UPS 등 항공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거점공항을 만들고 항공자유화(Open Sky Policy)를 실현시켜 아시아의 환승허브가 되어야 한다. 과거 중국을 봉쇄하였을 때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거점이 될 수 있었지만 경제중심축이 동북아시아로 옮겨진 후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아니면서도 세계최대시장인 중국과 가까운 한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항공여객 역시 중국과 일본은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이원화되어 환승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적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자유화를 지연시키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이 공항들을 대폭 확장하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환승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지금이라도 항공자유화를 실현시켜 환승거점이 된다면 국적항공사를 보호하여 얻은 이득의 수백배를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FTA허브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을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 시장개방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이라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시장을 제대로 개방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소선거구간에 3배에 달하는 인구편차를 없애서 투표권의 왜곡으로 국가정책이 소수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위헌적 상황부터 시정해야 한다. 실제인구보다 과다한 비중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여 식량무기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익에 상충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1806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영국이 미국, 프러시아 및 러시아로부터 어렵지않게 식량을 수입한 이래 식량무기화가 허구라는 것이 수없이 입증되었다.

한국은 식량가격이 국제시세보다 2~3배 비싸 94%의 비농업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만 생계비를 낮춰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FTA의 강도를 높이고 한·중 FTA 역시 고강도로 추진하여 진정한 FTA허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물류와 FTA허브를 만들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선결조건이다. 오늘날에는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순식간에 세계경제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세계금융위기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경제침체는 지금도 지속중이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립함으로써 각국의 방만한 재정을 통제하고 세계화폐를 공급하여 공정한 통화제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합에서부터 국제기구정상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물류와 FTA허브로서 아시아통합을 주도하고 AMF와 AU 및 ACB를 만들어 Aon을 발행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국가들을 설득함으로써 세계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이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먼저 아시아통합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할 때가 왔다.